

1회용 쇼핑백 이달부터 규제

백화점 등 고객제공뎀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백화점·도매센터·대형쇼핑센터 등에서 1회용 쇼핑백의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대중목욕탕에서 칫솔·삼푸·면도기 등 1회용품은 목욕료에 포함시켜 제공하는 것도 단속되며 이를 3번이상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요령'을 각 시·군·구에 시달, 이달부터 지도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장별 1회용품 규제대상은 백화점·도매센터·대형쇼핑센터는 비닐백과 쇼핑백, 목욕탕·숙박업소는 면도기·칫솔·치약·삼푸·린스, 10평 이상의 음식점은 종이컵·종이접시·나무젓가락 등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백화점 등에서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자체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목욕탕, 여관 등에서는 이용객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결혼피로연 등 경조사때나 자판기 판매, 배달음식, 고속도로 휴게소의 즉석식품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중기 육성자금 방출시작

지자체·중진공 업무협약 마무리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전환, 새로 조성된 지방중기육성자금을 운용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달 중진공과의 업무협약체결을 마무리 짓고 지방중소기업들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어 그동안 지연됐던 지방중기 육성자금의 방출이 시작될 전망이다.

중진공(이사장 채재억)에 따르면 올들어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을 새로 떠맡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자체들이 중진공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구조조정사업을 수행했던 중진공의 업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전국 15개 시·도중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키로 확정한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13개 시·도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할 사업성 검토 등을 중진공에 위탁하는 업무협약체결을 마무리 짓고 융자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부터는 지방중기 육성자금을 본격 방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를 비롯한 12개 시·도는 융자대상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평가 등 부분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대전은 사업성 검토에서 자금융자, 사후관리에 이르는 업무전반을 중진공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융자신청 접수창고는 각 시·도 또는 중진공으로 한정하거나 시·도와 중진공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지난달말에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중소기업들로부터 대출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어서 사업성검토 등 실무적인 절차를 고려할 경우 이달 중순부터는 자금방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조정자금중 2천억원을 지방중기육성자금으로 전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1천1백60억원과 함께 자동화 기술개발 및 창업자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품질경영실태 진단

공진청, 1천여사 대상으로 지도 요원 파견

공업진흥청은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경영체제 확립과 ISO 9000인증 획득을 위해 1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4백명의 진단지도요원을 투입, 품질경영실태 평가 및 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진단은 전자부품 공급업체 및 금형, 열처리 등 주요 기반기술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는데 진단결과 지도가 필요한 기업에 지도요원을 파견하여 정부예산으로 상주 지도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지난해 이미 5백여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12일간씩 품질경영진단 지도를 실시한바 있는데 이번에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품질매뉴얼, 모델제공 등 인증획득에 필요한 절차의 지시서 작성요령과 각종 정보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진단지도가 끝난후에도 인증획득 절차안내 등 후속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ISO 9000 인증획득 사례발표

표준협회, 금호석유화학 등 패널토론도

한국표준협회(회장 김선홍)는 지난달 25일 ISO 9000 인증획득 추진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국내 1호 인증업체인 동양피스톤을 비롯, 코리아제록스, 금호석유화학 등의 인증획득 추진사례의 소개와 함께 심사원들과 참가자들간의 질의 응답식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달의 '중기인상' 제정

매년 5월 중기대상도 실시

정부는 '이달의 중소기업인상'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상도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중소기업 주간행사에 실시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포상제도에 따르면 이달의 중소기업인상은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증대 등에 적극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매달 1명씩 선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상을 표창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상은 중소기업인 및 유관기관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인 가운데 기술, 경영, 수출, 창업 등 부문별로 기업경영에 가장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선정, 훈·포장할 계획이며 중소기업발전과 지원에 공이 많은 모범근로자, 협력우수 대기업, 지원유공자 등도 함께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중소기업 포상을 통해 개방과 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위축되기 쉬운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모범 중소기업의 우수 경영사례를 발전모델로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품질제일기업 선정

공진청, 5월말까지 추천·신청접수

공급진흥청은 전산업에 품질제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올해부터 품질경영활동이 가장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품질경영 100선'으로 공표하고 이들 회사의 주요 혁신사례를 전산업에 보급,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의 '품질경영 100선'은 오는 5월말까지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거친뒤 선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한 후 이를 종합하여 소비자단체 및 경제단체 등 각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 '품질경영 100선'에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5월말까지 공진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업별 조합이나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환경기술투자 지원 확대

UR대비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

정부는 앞으로 강화될 그린라운드에 대비, 기업의 환경기술개발 투자에 조세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종합적인 환경관련 기술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과거치가 마련중인 '종합환경관련기술대책안'에 따르면 기업의 환경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를 인상, 가속 감가상각 허용, 관세감면조치 등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융자기금확대,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GNP의 0.004% 수준인 공공부분 환경기술연구비(92년도)를 최소한 영국수준인 0.01% 정도로 끌어 올리고 총 투자액의 2%내외인 국내 대기업의 환경투자비도 대폭 늘려나가도록 유도키로 했다. 독일의 경우 화학산업은 총 투자액중 19%, 수송·철강기계 부문은 7%를, 일본은 총 투자액중 10%를 환경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과거치는 이와 함께 환경기술개발의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대학·출연연, 정부 등의 산·학·연·관 협동체제를 구축, 역할분담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환경과학 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키로 했다. 고급 전문인력은 KAIST,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을 통해 양성하고 전문기능인력은 국내 전문대학과 환경공무원, 교육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환경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키 위해 기술개발 단계를 외국기술도입,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국내 자체개발 등 3개부문으로 나뉜 대책을 수립키로 했으며 앞으로 환경산업이 전성기를 이룰 것으로 전망, 환경산업을 해외수출 주력업종으로 육성키로 했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체물질 및 대체에너지, 저에너지, 제품기술, 리사이클을 고려한 기술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과거치는 또 KAIST 환경연구센터를 종합적인 환경기술 대책기구로 확대 개편, 선진국의 동향분석, 선진 환경

기술 이전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기구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신기술 인증제 확대운용키로

공업발전기금으로 기술개발 자금지원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인증제도(NT마크제도)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을 공업발전기금과 연계하고 또한 신기술 개발후 상품화에 성공할 경우 이들 제품은 정부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함으로써 판로도 확보해 주기로 했다.

지난달 2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도입돼 시행하고 있는 NT마크제도는 지난해중 99건이 신청돼, 이중 19건이 정부의 기술인증을 받았으며 8건은 NT마크를 받지 못했지만 우수 기술로 평가받았다.

상공자원부는 이 제도가 주로 중소기업들의 신기술 개발 노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재원을 지난해의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대신 올해부터는 공업발전기금의 기술개발자금으로 대체해 운용하고 금융기관의 기술개발 자금을 우대 지원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NT마크 획득 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 제정될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업종별 단체주관으로 신기술 제품의 상호구매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ISO 상호인증 제휴 잇달아

경비절감·수출촉진 효과

국내외 ISO인증 기관이 서로의 인증업무를 인정하는 제휴가 잇달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인증 경비 절감은 물론 수출촉진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한국품질인증센터가 호주 표준협회와 ISO인증을 공동 심사키로 한 이후 올들어 미국 UL, 영국 DNVQ와 공동심사키로 했고, 생산기술연구원도 미국 UL과 상호 ISO인정 계약을 추진, 빠르면 내달중에 양해 각서가 교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는 상호인증 부문에 대한 인정의 전단계로 공동심사에 합의, 1번의 심사로 2개 인증기관에 등록할 수 있어 인증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폐기물관리기금 용자지원 금액 100억

재활용산업 육성 및 대상자 선정 기준 확정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폐기물관리기금 용자지원 금액이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분야 80억원, 재활용기술 개발 지원 20억원 등 총 100억원으로 확정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94년 3월 15일부터 용자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폐기물관리기금 용자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용자지원 대상자는 재활용시설 설치의 경우 ▲재활용 시설 설치사업 ▲자원재활용 사업 ▲폐기물재활용 사업

[표1]재활용산업관련 용자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분야	사업명	용자대상자	관련법규
재활용 시설 설치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재활용 가능 자원 또는 재활용 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설비 등을 설치하는 자	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자원재활용 사업	재활용 지정 사업자, 제1종 지정 사업자, 제2종 지정 사업자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법 제9조 내지 제12조
	폐기물의 재활용사업	폐기물을 원료 재료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 관리법 제44조의 2
	재활용 산업의 육성대상 사업	재활용 가능 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 등 중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자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자	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재활용 기술개발	연구기술 개발사업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 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자	법 제2조 제8호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